

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개요

2014. 4. 24

목 차

- 1 추진배경
- 2 그간 추진경위
- 3 산업계 의견반영 주요내용
- 4 법률안 구성체계
- 5 법률안 주요내용
- 6 산업계 건의 추가반영 내용
- 7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

1. 추진배경

추진배경

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쟁송고통, 사고기업 도산, 국민세금 투입 등의 악순환 차단

피해자

- ✓ 인과관계 입증곤란
* 정보확보곤란, 지식부족
- ✓ 고액 소송비용
* 생계유지곤란, 소송포기
- ✓ 소송 장기화
* 이혼, 자살, 공동체 파괴

사고기업

- ✓ 이미지 추락
- ✓ 민원폭주
- ✓ 경영권 상실
- ✓ 배상비용, 도산

국가

- ✓ 특별법 제정
- ✓ 혈세투입

피해자 입증부담 경감, 환경오염피해 보상보험가입 등을 통해 **피해자를 보호**하고 **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**

2. 그간 추진경위

추진경위

대선 공약

- 제18대 대통령 **대선공약**(‘12.12)
- 박근혜정부 주요 **국정과제**(‘13.5)

추진 내용

- 『**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 포럼**』 운영(‘13.4~, 14회)
 - 국회·정부·학계·산업계·법조계·시민단체 등으로 구성
 - 쟁점사항 조정 및 법률안 마련(~‘13.5)
- **이해관계자 의견수렴**(‘13.5~7, 11회)
 -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(‘13.1, 3)
 - CEO간담회·산업계 설명회·KBCSD 간담회(‘13.5~6)
 - 환경분야 주요학회장 간담회(‘13.5)
 - 공청회·시민단체 토론회·중소기업·녹색기업 등(‘13.6)

3. 산업계 의견반영 주요내용

산업계 의견반영 주요내용

- 포럼,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반영(포럼 14회, 의견수렴 11회)

책임대상

- 환경오염 유발시설로 한정
 - 행위책임 및 제품피해 제외

피해배상 범위

- 제3자의 인적 · 물적 피해(자연환경훼손 제외)

배상한도

-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

책임이행

- 고위험시설 보험가입/ 부담금 부과 배제
 -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금액으로 규정

남소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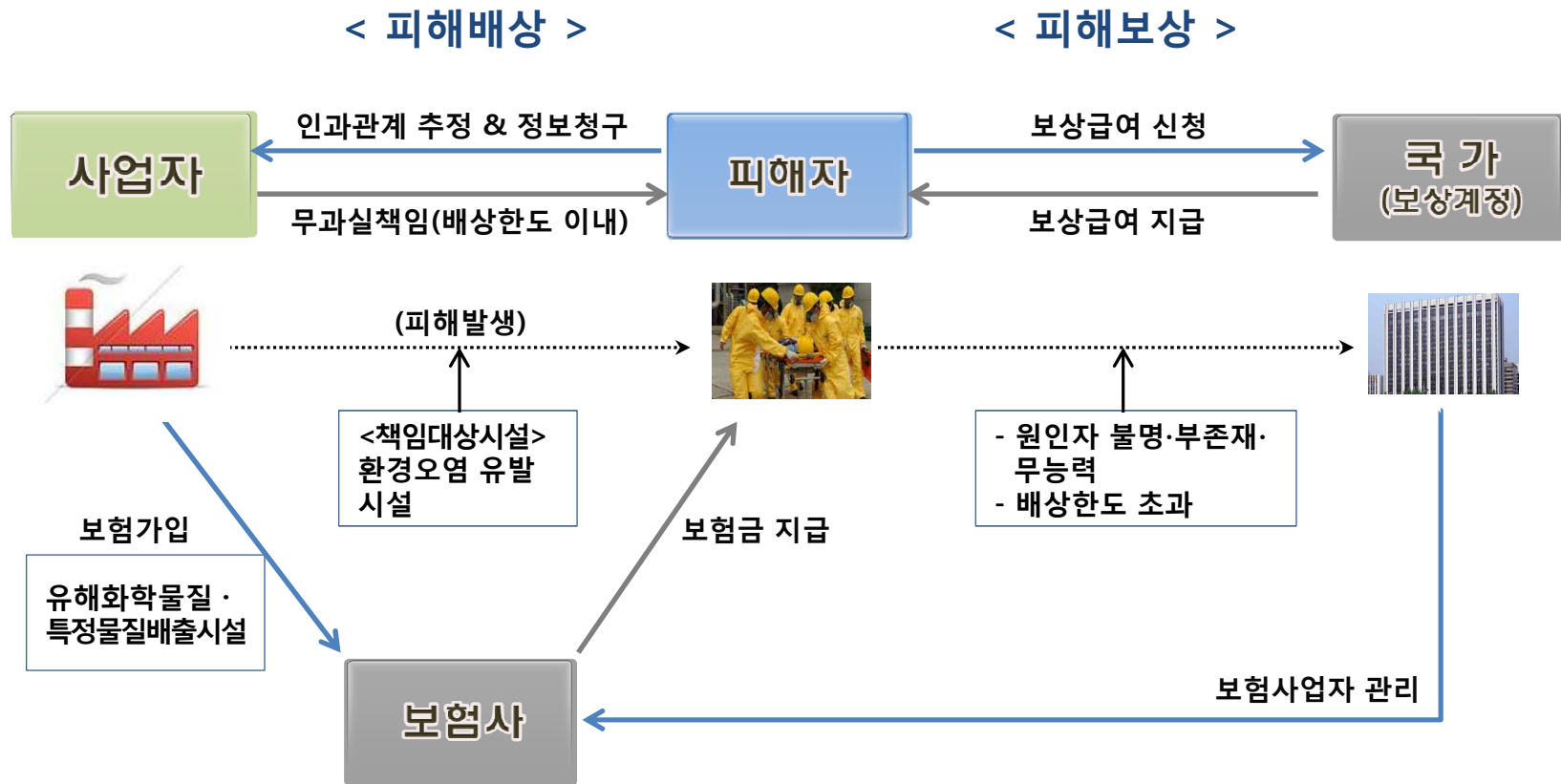
- 집단소송, 소급적용 배제

재정지원

-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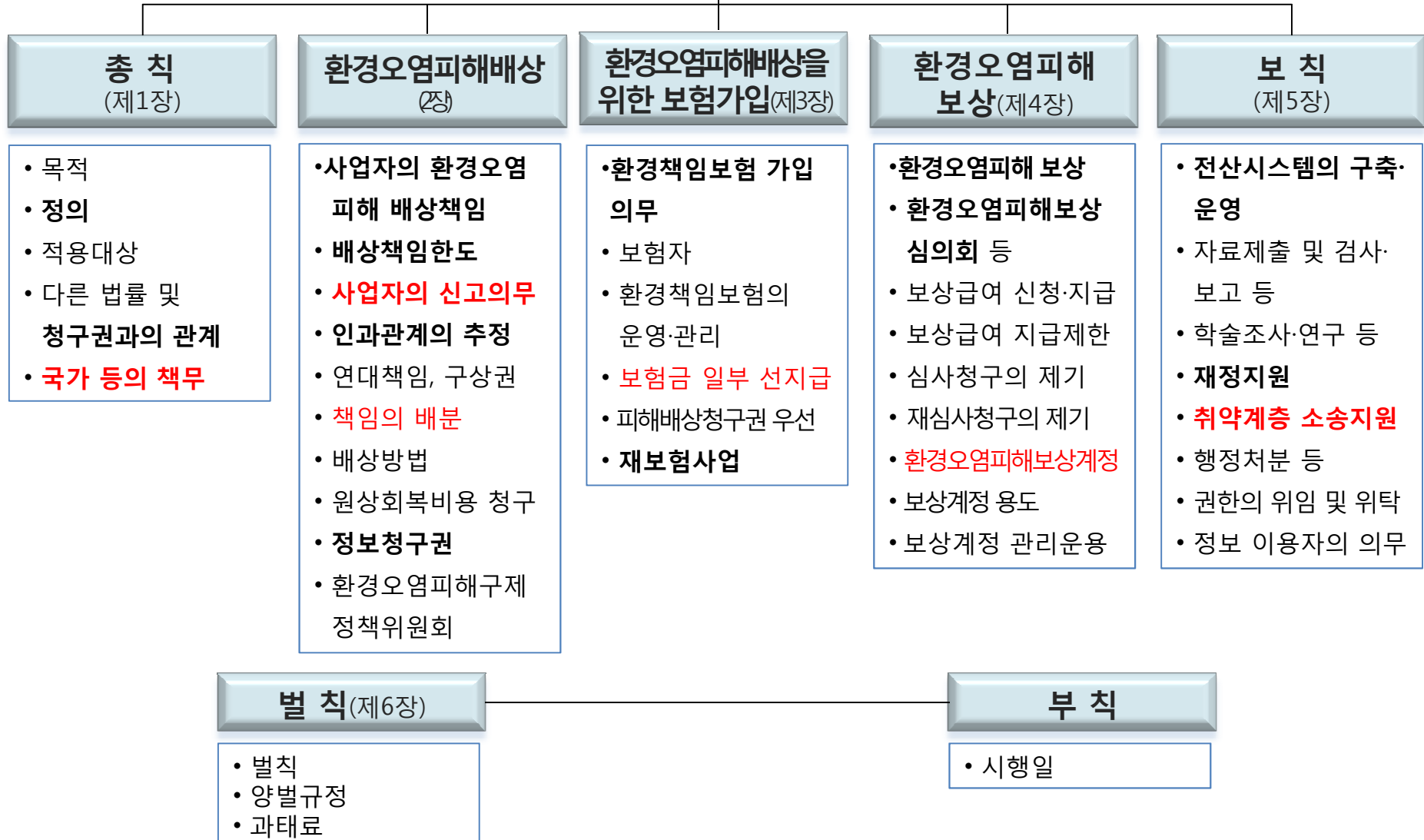
4. 법률안 구성체계

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체계도

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(6장, 본문 49개 조, 부칙)



5. 법률안 주요내용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

책임대상 시설(안 제3조)

- ☑ **대기**오염물질 배출시설
- ☑ **폐수**배출시설· 폐수무방류 배출시설
- ☑ **폐기물**처리시설
- ☑ **가축분뇨** 배출시설
- ☑ **토양**오염관리대상시설
- ☑ **유해화학물질**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
- ☑ **소음·진동**배출시설
- ☑ **잔류성 유기오염물질** 배출시설
- ☑ **해양**시설
- ☑ **건설폐기물** 처리시설

환경오염피해 배상 범위 및 책임주체

책임 범위

- 시설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적·물적 피해(안 제2조)
 - 자연환경훼손 등 환경피해는 제외
-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한 **배상책임 한도** 설정(안 제6조)
 - **2천억원** 범위에서 시설규모 등을 감안, 대통령령으로 규정
 - * 독일(2,400억원), 국내우주손해배상법(2,000억원), 원자력법(5,500억원)

책임 주체

- 시설의 **소유자, 설치·운영자(안 제2조)**
 - 해당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

피해자 입증부담 완화

인과관계 추정 및 배제(안 제9조)

- 시설이 피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**상당한 개연성**이 있는 경우 **인과관계 추정**(피해자 입증부담 완화)

※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지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, 사용된 설비, 투입·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

- 시설을 **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배제**

※ 환경관련법령,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련 법령 준수시

정보청구권 부여(안 제15조)

- 피해배상 및 구상을 위해 **피해자 및 사업자에게 정보청구 및 열람권** 부여

※ 시설의 가동과정, 사용된 설비, 투입·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

- 정보제공 여부를 **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결정**

환경책임보험 가입

가입 대상



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**가입 의무화(안 제17조)**

- **유해화학물질 영업자**, 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자
- **특정 대기·수질** 유해물질 배출시설
- **지정폐기물** 처리시설
- **특정토양** 오염관리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**해양시설**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가입 금액




시행령에 **최저 가입금액 규정**

- 업종별 위험도,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규정 예정

재보험 운영

국가 재보험

 **거대 환경피해**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국가재보험 도입(안 제22조)

➤ **국가재보험 없이** 민간보험사가 거대위험을
다 보상할 경우,

- 보험료를 대폭 높여야...
- 해외 재보험 인수 꺼려...
- 보험시장 형성 불가능...

➤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정비율을
국가에 **재보험료로 납입**

※ 태풍 루사('02)와 매미('03)로 인해 피해액이 커지면서 보험사
(농협)의 손실이 증가하여 보험인수 포기. 보험료 인상에
제약이 있어 일정 피해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재보험 도입

재정지원

지원 대상



소기업(안 제41조)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에 따른 **소기업** 중 환경관리가 양호한 기업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: **상시 근로자 50명 미만**
- 기타 : **상시근로자 10명** 미만

지원 내용





보험료 일부 보조


- 보험료 일정비율(기재부 협의 예정)

피해보상(안 제4장)

대상  **원인자 불명/부존재/무능력, 배상한도초과** 피해


종류  보상급여 종류 및 한도금액은 대통령령에 규정

피해 인정 절차  예비조사 → 본조사 → (환경오염피해보상심의회) **피해등급 및 금액 결정** → **보상급여 지급**
※ 조사결과 및 결정에 불복시는 심사·재심사 청구 가능


조사단 설치  환경오염피해조사 및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**‘환경오염피해조사단’** 설치
➤ 피해조사 및 연구, 보상계정 운용·관리 등 전담

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(안 제35조~제37조)


재원

-  정부출연금, 재보험료, 개인·단체 등의 기부금, 기타 운용수익 등

용도

-  보상급여 지급, 배상한도 초과 피해 보상, 재보험금 지급,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,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

관리 운용

-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관

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(안 제16조)

구성

- 위원장(환경부차관) 포함, 20인 이내로 구성
 - 환경, 법조계, 학계, 보험, 피해평가 분야 전문가
 - 산업계, 해양관련 전문가 추가

기능

- 보험제도 운영 관련 사항 심의
 - 피해평가기준, 보험자 선정 및 약정체결, 보험료 지원,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피해구제에 관련 사항 심의
 - 보상급여 재심사 심리·재결, 환경오염피해보상에 관한 사항

6. 산업계 건의 추가반영 내용

1 적법한 시설운영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배제


산업계

- 시설의 적법한 관리·운영시 인과관계 추정 배제
- 독일 환경책임법도 적법운영 시설은 인과관계 추정 배제

**반영
내용**

- 적법운영시 인과관계 추정 배제
- 적법운영 범위에 안전관련 법령 포함
 - 환경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·운영 관련 기준
 - 위험물안전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, 소방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
- 적법운영 여부 판단
 -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2 배상책임한도 예외 한정

산업계  환경오염피해 원인 제공 시설 또는 사업자로 한정

반영
내용



의견 수용
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환경오염피해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사업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환경오염피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방제와 관련한 합리적인 협조 요구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

3 정보청구 거부 및 공개범위 제한권한 부여

산업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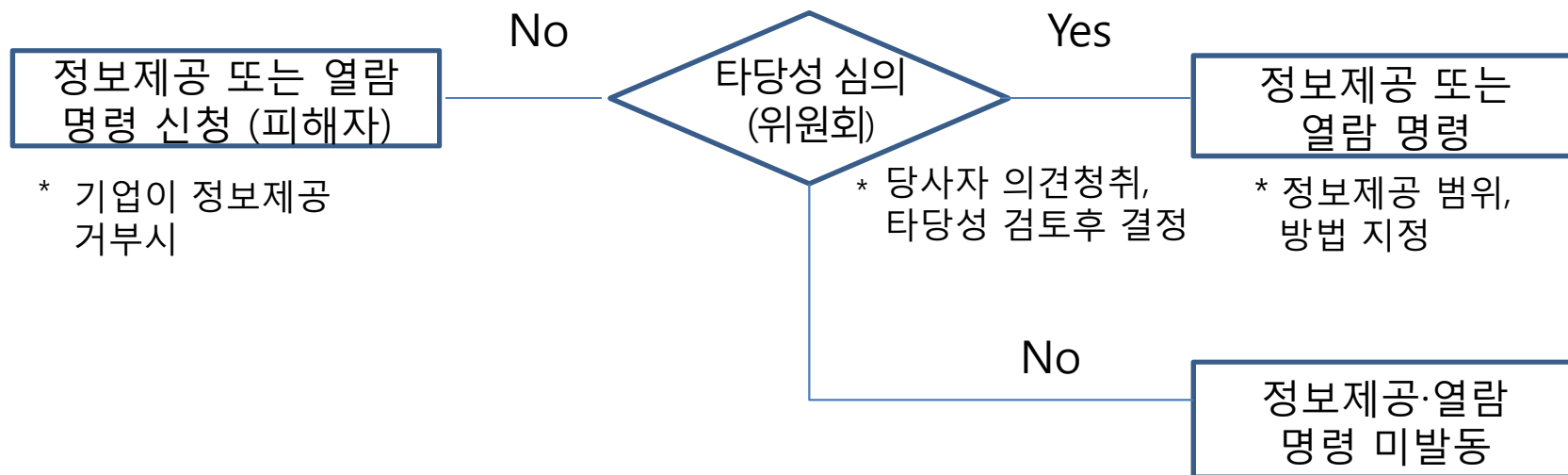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영업비밀, 사고와 관련없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및 범위 제한 권한 부여

반영 내용

- **의견 수용**
 - 위원회에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여부 결정
 - 정보제공 범위를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
 - 정보의 목적외 사용, 타인에게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정보제공·열람 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

< 정보제공·열람 명령신청 처리 절차도 >



* 정보청구의 남용 및 부당사용방지를 위해 목적외 사용, 다른 사람에게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4 법률 시행시기 최대 8년 유예

산업계 ● 법률 시행시기 8년 유예

- 반영
내용
- 법률 시행시기 →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
 - 보험가입 시기 6개월 추가 유예

5 책임공제 사업에 업종별 사업자 단체 추가

산업계

- 유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단체가 공제 사업을 시행,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공제사업 수행

반영 내용

- 효과적인 재무대책을 위해 책임공제 삭제 및 보험 가입으로 일원화
 - 사업관리 이원화 및 공제 사업자가 소규모로 분할되어 효과적인 목적 달성 곤란
 - 업종별 사업자 단체는 약 50개, 보험가입 대상 업체는 최대 4만개로 추정

7.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

향후 추진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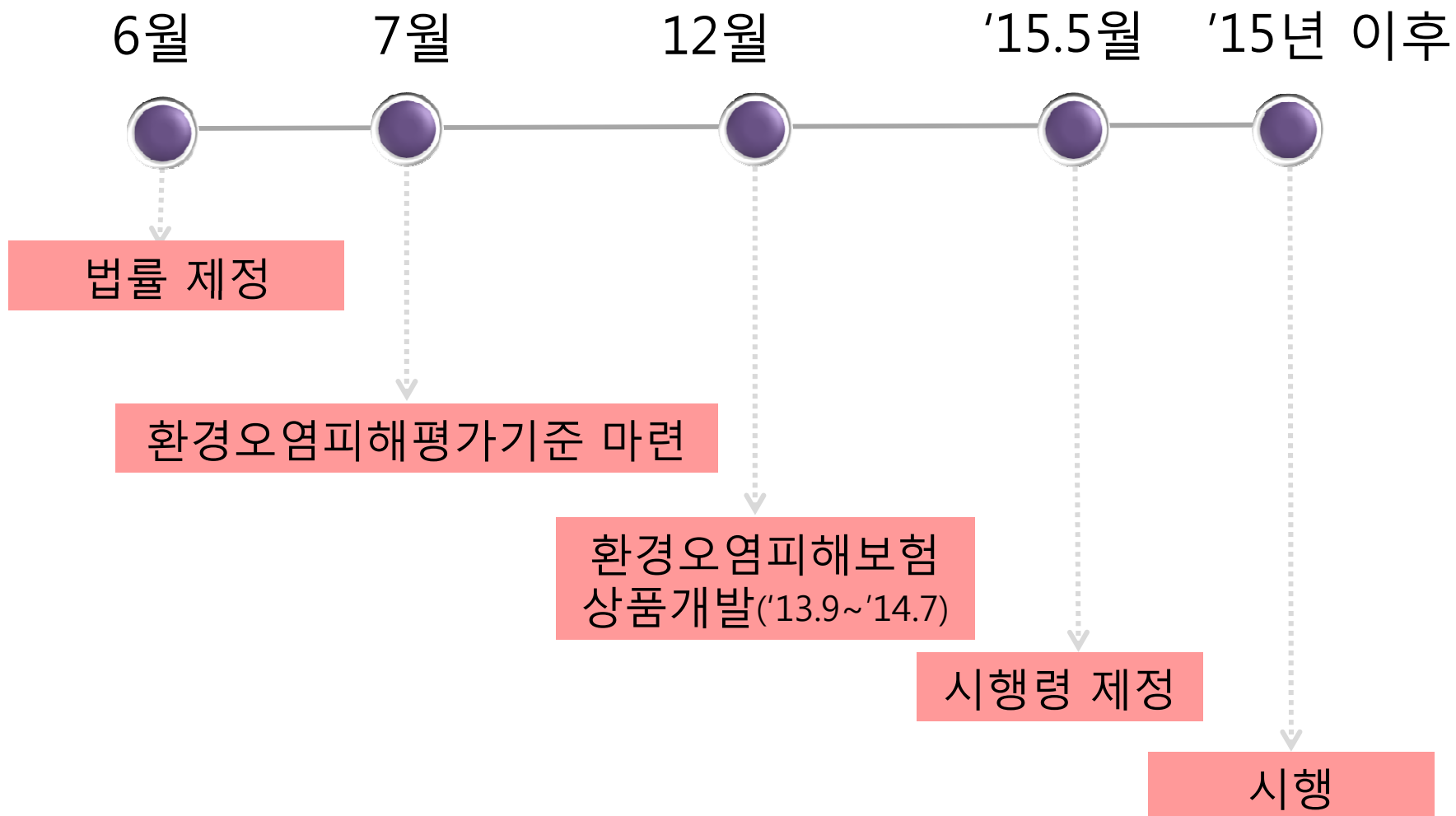
● 산업계 협의회 운영

- 하위법령, 세부 시행기준 등 협의
- 정부, 산업계, 보험업계, 연구기관 관계자 20명 이내 구성
- 하위법령 마련 시까지는 격주 1회, 이후 월 1회 운영

●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운영관리시스템 구축

- '14.12월까지 보험상품 개발 및 금감원 승인 추진
- 보험가입대상사업자 관리, 인허가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

추진일정



기대효과

현재

2015년 이후

피해자

위법성,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
⇒ 소송 장기화, 고액 비용

인과관계 추정, 정보청구권
⇒ 소송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

사업자

불의의 사고 한번으로
도산, 이미지 추락 위험

보험가입, 배상책임 한도
⇒ 위험분산, 지속가능경영 보장

국 가

국민 세금으로 피해 보상
특별법 제정

보험 의무화, 보상계정 설치
⇒ 사회안전망 구축, 보험시장,
일자리 창출

감사합니다

